

# 민주, 가덕신공항·공수처 '속도전' “정기국회서 법안 처리”

이낙연 대표 “공수처 표류하는 일 막을 제도 개선 필요”

신동근 의원 “밥상 엮는 게 캄패짓, 국민의힘이 하는 중”

공수처법 개정안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서 심사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검토... 국민의힘 PK 의원도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캄패짓'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가덕신공항 문제 또한 당내 TK(대구·경북) 세력과 PK(부산·경남) 세력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방어 동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을 점검하고 처리를 주문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공수처 출범 문제였다. 그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공수처법)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이 배반당했다”라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5·18 법안과 4·3특별법, 일하는 국회법, K뉴딜 관련 법안 등도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로 꼽았다. 증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수처법 개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공수처의 구성과 가동이 장기간 표류하는 일은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날 의결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캄패짓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야당 측이) 밥상을 엮어버려서 새로운 상을 차리는 게 캄패짓인가, 밥상을 엮는 게 캄패짓이지”라며 “캄패짓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라

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염원에 부응하려면 올해 내에 출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및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소수위원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했다”며 “지금 와서 회의를 한 번 더 연다고 해서 어떤 진전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며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가덕신공항 신속 추진에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전 용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기존 결과 준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들어갔는데, 우리도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 신속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 살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0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소상공인 살리기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박한 상황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체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없다면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법 통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됐던 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부패 NO... 폭력도 NO...

도의회, 부패 방지·폭력예방 교육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등 소개  
가정폭력 피해자 도움 방법 등도

전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 방지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두성 강사(한국청렴전문가협회 전북지회장)와 최선광 강사(도체육회 스포츠인권 전문위원)를 초청해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및 청렴 마인드 제고', '성매매·가정폭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뤄졌다. 김두성 강사는 왜 청렴해야 하는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 청탁금지법 핵심 조문과 관련 사례, 청탁금지법 해석과 위반사례 판례, 청렴의식 내면화와 방안 등을 설명했다. 최선광 강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움 방법 및 성매매 예방을 통해 건전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소개했다. 송지용 의장은 “청렴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 성의식 조성에 온 힘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환경대청상 시상식

김희수 도의회 교육위원장 학교 내 공기질 향상 '결실'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전주 6)은 지난 20일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주관한 '제22회 전북환경대청상'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도의원 출마 시절부터 꾸준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최근에는 학교 내 공기 질 향상과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온 공을 인정받았다. 김희수 위원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내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 “덕유산 국립공원에 묵인 재산권, 이제 풀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주기 축소 요구

무주군에서는 덕유산 인근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무주군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현행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19일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유산국립공원이 1975년에 지정된 후 2010년에서야 일부 마을과 능경지가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곳이 국립공원 구역에 묶여있고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국립공원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득이할 경우 정당한 보상

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에도 배치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무주군에 의견을 물었다.

무주군 환경위생과장은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주는 나무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재산권행사 제약 받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덕유산이 전체 무주군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결코 작지 않다. 무주군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5년에 한 번씩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올해 실시하고 결과가 확정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그대로 적용된다. 문은영 부의장은 “사회의 변화속도가 느렸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매우 빨라 10년이면 엄청난 기간이다.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이익을 우선해서 국립공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조사를 주기도 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채영병 전주시의원 친환경사회 실현화 기여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효자 4·5동)이 저탄소 친환경사회 실현과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0 전북환경대청상' 의회부문 은상을 받았다.

채 의원은 지난 20일 전주 바울센터에서 열린 NGO환경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제22회 전북환경대청상 시상식에서 저탄소 친환경사회 실현과 미세먼지 감소 생활화로 건강한 삶,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북지환경위원회 소속인 채 의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 환경문제에 있어 대안 발굴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무단쓰레기로부터 지역주민 주변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채영병 의원은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제4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참정대회 개최를 응원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kr